

# 더불어민주당 20대 공약 - 안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 7대 약속

<b>1</b>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16
<b>2</b>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37
<b>3</b>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45
<b>4</b>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64

<b>5</b>	<b>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b>	_____ 82
<b>6</b>	<b>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b>	_____ 90
<b>7</b>	<b>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b>	_____ 107
<b>정책 이슈 스토리</b>	청년과 더불어	_116
	직장인과 더불어	_120
	자영업자와 더불어	_124
	어르신과 더불어	_128
	여성과 더불어	_132
	중소상공인과 더불어	_136
	농어민과 더불어	_140
<b>재원소요 규모 및 조달 방안</b>		_145

##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 이명박·박근혜정권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서민경제는 황폐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였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긴장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자리불안, 보육·교육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안전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는 새누리당 정권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낙수경제론을 고집함에 따라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 그리고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은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위기 단계이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입니다.
- 이런 한국 경제사회의 고질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단방약과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병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 3대 비전

### 더불어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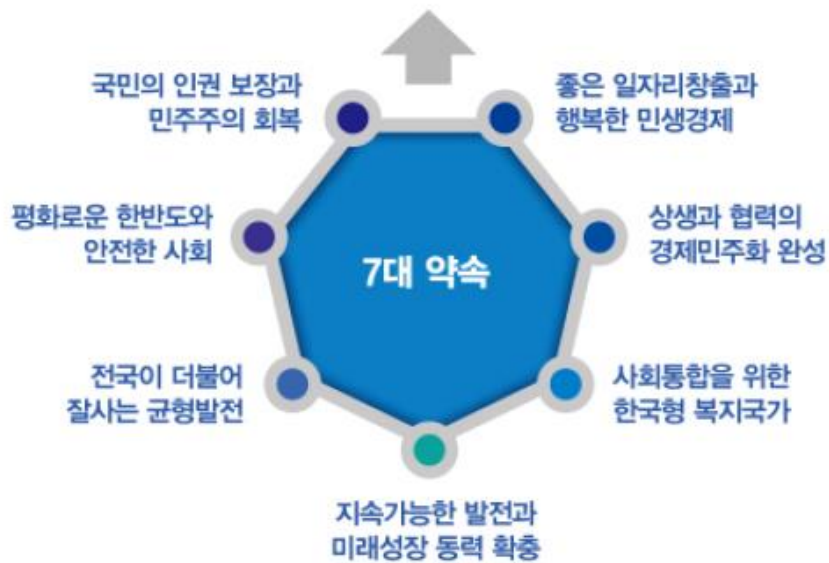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계층간, 지역간 상생발전

### 불평등 해소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고착화된 사회구조와  
넓은 세력의 변화

### 안전한 사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전 사회  
건강한 가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





6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1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 활동을 확대하는 등 한미간의 상호 호혜적인 굳건한 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
  - 한미간 정보공유 체제 강화,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독자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제를 갖추어 확고한 대북억지력 확보
-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실시간 지휘통제체계를 구축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2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변 4강과의 평화 협력 외교 실현
  -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 동북아 국가간 갈등과 대립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 구축
  - 6자회담을 동아시아안보협력체로 발전
  - 한·중·일 3국과 북한, 몽골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강화
  - 북한, 몽골 등 역내 저개발 국가 개발지원을 위한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
  - 북방대륙경제 진출을 통한 한반도 신경계지도 실현

### 3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 대북정책의 통합 조정과 정책 기능 강화
  - 통일부의 역할 강화 및 중복 기능 개선
  - 통일·외교·안보 관련 청와대 조직(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개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 기능 강화
- 민주통일재단(가칭) 설립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남대화 촉진과 민간 통일운동 지원
- 남북합의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통한 남북협력 증진

### 4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2(남·북)+2(북·미)회담 개최와 6자회담 조속 재개 추진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다양한 분야별 남북 회담 제도화 추진
- 남북국회회담을 통한 통일대비 법·제도의 정비·보완 작업 등을 실시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절차와 제도 마련



## 5

## 남북주민 모두 잘사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총선·대선 승리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경협 재개 추진
  - 남북협력 사업 안정화를 위한 남남합의, 남북합의, 국제합의 강화 방안 마련
  - 남북경제협력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남북 합의서 채택
  - 북한 농촌, 산림 등에 대한 개발협력 추진
  - 전면중단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피해 보상
- 백두산·평양 관광 추진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 평양에 남북경제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 「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20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제정 추진

## 6

##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사업 본격 추진과 남북 지자체 자매결연 사업 추진
- 개성 만월대 복구, 거례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남북 민간교류의 본격적 추진
- 남북 방송·정보통신 교류·협력 사업 적극 추진
- 광역 지자체별로 '통일센터' 설치
  -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 건립·설치
-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대북확성기 방송 규제

## 7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을 이루겠습니다

-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을 위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Freikauf; 냉전시절 동독의 정치범 등을 서독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송환받은 사업) 추진
- 남북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 실질적 인권 개선 추진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등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8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의 개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격하고 독자적인 통제방안 마련
- 우리의 사법주권을 제약하는 한·미 SOFA 규정을 개정하여 주한미군 범죄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사법주권 확보
-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와 관련하여 불분명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규정 개정

9

###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전환 추진
-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간부 대비 병의 비중이 높은 병력집약형 구조를 미래전에 적합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
-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 병력의 정예화, 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 등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참여정부 시절 연 평균 증가율 수준 제고
- 방위력 개선 등 자주 국방력 확보를 통한 북한 전략무기에 대한 억제력 확보
  - 북한 억제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 첨단기술 개발 능력 확보 및 국방과학기술 인력 대폭 확충

10 방산비리 근절 및 방위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으로  
군비확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안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습니다

-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국내 방위 산업의 대대적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으로  
군비확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안보 선순환 구조 창출
- 기업 지원사업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방위사업 관련 분야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방산비리의 경우 '이적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방산 비리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연수 대폭 연장
-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부당이득 외에 부과되는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등록 취소 등 제재 강화
-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없애는 등의  
군 사법 체계 개편으로 방산비리에 대한 군사법원의 온정적인 판결 개선



## 11

## 사병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병 월급을 평균 10만원 인상하여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 제대시에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퇴직금 제도 도입
  - 사병 급식비 단계적 인상, 사병 생활관 등 조기 개선 추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군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확대, 군 응급 전문인력 확대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군내 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보호 등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 격오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셔틀의무버스 운행
- 복무기간 중 취득할 수 있는 대학 교육학점을 현행 9학점에서 15학점으로 상향 추진





12

**'직업군인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높ی겠습니다**

- 군인의 정년 연장과 계급별 정년 단계적 폐지 추진
- 여군들에 대한 복지 및 인권 확충
  - 기혼 여군들의 복무 및 출산·육아 양립을 위한 '여군 모성복지시스템' 강화
  - 군대내 여군 관련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히 적용
-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처우개선
  - 전세자금 지원 단가를 실 소요에 맞도록 단계별 현실화 추진
  - '격오지 수당' 인상으로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군인 자녀들에 대한 대학 장학금 지급 등 지원 강화
  - 군인 자녀의 안정적인 학습여건 강화 및 대도시 기숙 시설 확대
  - 군 주둔지역에 체육센터 등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복지시설 마련
-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이 '사이버 대학' 과정을 통한 학사 학위 취득 등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



## 13

###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작전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화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통제보호구역의 경우는 원점에서 합리적 재조정
- 군 작전을 이유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반환하거나 현 시가를 고려한 감정가로 협의 매수 또는 사용료를 지불
- 군용항공기지 등과 관련한 규제는 최소화
  - 비행안전구역과 고도제한의 합리적 조정
  - 소음 피해대책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군용항공기지의 이전을 포함한 포괄적 방안 모색

## 14

### 국민을 위한 희생 국가가 보답하겠습니다

- 독립, 민주화, 호국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 지원 확대
-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 및 보존 강화
- 제대군인 취업 지원 확대



## 15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위험시설과 위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규모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통신지원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
  - 안전교재 개발, 안전교육강사 양성, 안전체험시설 확보, 안전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민안전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재난 의무가입 대상 확대
-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보급 및 훈련 강화
- 지자체별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별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 민방위 훈련은 지역내 대피소 찾기 훈련 등 권역별로 특화 실시





## 16

##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대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무단장기결석일을 3일로 축소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는 영유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할 시 시설장이 해당 내용을 관할 경찰청에 통보
  - 통보받은 경찰서는 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 해당 영유아 및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학대 여부 확인 의무화
- 피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호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재 5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치료를 위한 쉼터 대폭 확대
- 아동 학대 예방 교육프로그램 강화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 아동 학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 확충 및 법규 단속 강화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 확대
  -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이나 수상안전교육 확대 및 활성화 지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가의 낡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지원

### 17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책임지겠습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을 위한 종합먹거리전략(푸드플랜) 수립
-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친환경 급식 공급 확대
  -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노인회관 등 아이들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유기가공품 공급 확대
-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 도입
- 농민장터, 꾸러미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소비자 직거래를 강화
- GMO 완전 표시제 도입

### 18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발생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초)미세먼지 측정망확대 및 전문인력 보강 추진과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산업시설이 집중된 미세먼지 발생 우심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 실시
- 미세먼지 과다발생이 우려되는 교통량이 집중된 곳에 학교, 유치원, 요양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 학교버스, 학원버스를 CNG로 교체해서 어린이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실현
- 대중교통(지하철)이용 승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공 교통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 19

소방과 해경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
  - 재난 방지를 위해 평생직업으로 종사하는 소방직종의 경험과 소방산업육성 등 중앙정부의 소방정책 입안 관리기능 강화
- **소방장비를 현대화 하고 해경구조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등 노후장비의 현대화 추진과 현장인력 보강 및 인력의 정예화 추진**
- **특수구조대의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통해 육상이나 해상 출동의 골든타임 확보**
- **소방 예산 확충과 소방인력 처우 개선**
  -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금 비중 확대
  - 119 기능 확대를 통한 국민 생활안전 관리강화
  - 현장 3교대 근무 보장, 근속승진 확대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 **해경의 정상화를 통한 기능 및 역할 강화**
  - 해경의 현장 단속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 재정비 및 정상화
  - 대량 살상무기와 각종 위험물을 해상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경의 경비함정 세력 확충



20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경찰인력 확충, 수사 장비의 현대화, 전문수사인력의 양성으로 민생치안 강화
- 지방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 강력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상시 소탕체제 구축
  - 범죄 신고자의 보호대책을 강화하여 보복범죄 방지
  - 지역별 각종 범죄지도 제공 확대
  -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무기한 단속 실시
-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민생경찰 3교대 근무 보장, 근속승진 확대 등 경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21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서  
사고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화학사고 발생으로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개선
-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화학물질 관련분야 업무를 지자체도 담당할 수 있도록 직원 확충

## 22

## 원전 재앙 없는 나라에서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인사권, 예산권을 별도로 부여하여 철저한 안전감시책임과 의무부여
  - 인적 구성에 있어 여·야간 균형을 맞추고 상근직 위원 확대 추진
-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운영·수명연장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 강화

## 23

##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제2의 메르스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겠습니다

- 부족한 공공의료(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를 확충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검사하고 치료하도록 조치하여 공공병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 감염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병원 시설과 인력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적자금의 집중적 배분
  -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의 국립대학병원에 격리병동건물 신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의사, 간호사, 보건학 전문가 등으로 전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교류 및 국내외 교육훈련 제공

24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제도 전면 개선 추진
- 국제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조사권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재편하여 개인정보보호 감독 강화
-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강력 처벌 및 피해 보상 의무화
  - 불법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게 과징금 기준 최고액을 상향 부과하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
- 일정 범위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 책임 강화
- 인증·보안기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선택 및 보안 전문가 육성 지원

25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재외동포청 설치
-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호보법」 제정
- 재외공관의 국민안전보호 활동 강화
  - 재외공관의 대응체계 및 영사서비스의 획기적 강화
-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해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재일 영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